

공 개



의안번호	제 61 호
의 결 연 월 일	2020. 2. 19. (제 3 차)

의
결
사
항

(주)KB국민카드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은 성 수
제출 연월일	2020. 2. 19.

1. 의결주문

(주)KB국민카드의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주)KB국민카드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함에 따라 이를 심사하여 지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주)KB국민카드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류를 통하여 심사기준 충족여부를 심사한 결과, 서비스의 혁신성, 규제특례 적용의 불가피성, 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방안 등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주)KB국민카드에 대해 지정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별첨】 참조

나.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의필(2020.2.14.)

(별지)

(주)KB국민카드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주)KB국민카드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 다 음 —

1. 상 호 : (주)KB국민카드

2. 혁신금융서비스의 종류, 내용 등 업무범위

- 개인간 중고차 직거래시 신용카드 결제 및 결제대금 예치(에스크로) 기능을 제공하는 중고차 직거래 카드안전결제 서비스

3. 혁신금융서비스 이용자의 범위 등 업무대상

- 서비스 이용대상은 KB국민카드 회원(구매자)과 KB국민카드에 일회성 판매자로 등록한 가맹점*(판매자)으로 한정하고, 신용한도 심사를 별도로 진행

* 가맹점 등록 허용 기준을 운영하여 금융질서문란자들의 가입이 제한되고 이상차량은 서비스 이용 대상에서 제외하며 판매자/구매자 자격으로 연간 1회만 이용 가능하도록 거래이력 관리를 통해 반복 매매를 제한

4. 혁신금융서비스의 업무방법

- 국민카드 회원(구매자) 및 판매자(개인)가 동 서비스 가입 후 계약서 등 제반 서류 제출 후 서비스 이용과 결제금액 및 방식(할부 등 선택)을 확정하여 신청하면, 카드사인 신청인은 이상차량 여부, 판매자 심사를 통한 일회성가맹점 적합 여부, 구매자의 결제능력, 차량시세 등을 고려한 결제(여신)한도 설정 등을 하고 거래의 진위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카드기반 안심결제를 진행

5. 규제특례 대상 금융관련법령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가목, 제18조의3제2항·제3항, 제19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제4항

제2조(정의) 5. “신용카드가맹점”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소지자(이하 “신용카드회원등”이라 한다)에게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

제18조의3(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 ②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가 제1항에 따른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이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지 못한다.

②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를 할 때마다 그 신용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이용하여야 한다

④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부가조건

- (카드부정사용/불법현금유통 방지) 개인간 거래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카드회원인 판매자/구매자에 대한 사항, 거래내역 등을 별도로 관리하고, 부정거래, 불법현금유통 등 이상거래 의심시 관련 당국에 보고
- 신용카드 결제가 중고차 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거래 계약서, 이전등록 여부 등을 점검하고, 동 서비스가 개인간 불법적인 현금 유통에 악용되지 않도록 부정사용 방지 방안을 마련
- (안전결제 절차 마련 등) 판매자와 구매자가 제출해야 할 제반 서류와 대금 지급 요건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안내

- **(수수료 등 이용가격 고지)** 대상 사업이 이용자(판매자/구매자)로부터 이용 수수료 수취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이용자에게 사전에 수수료 수준 등 가격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동의 받을 필요
- **(일시불 외 기능 이용시 조건 안내)** 구매자가 카드 일시불 결제 이외에 신용카드 할부거래 또는 일시불 결제 이후 복합할부금융 상품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거래별 이자율, 개인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 등 세부 조건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철저히 안내
- **(결제 한도 부여정책 수립)** 구매자의 신용 및 결제능력, 거래대상 중고차 시세 등을 고려하여 구매자의 결제능력 및 시세를 넘어서는 여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한도 부여 정책을 마련하고,
 - 사업 초기에는 리스크 방지를 위해 중고차 거래 평균가격 등을 고려하여 한도를 설정
 - * 예) 서비스 출시 후 1년간 이용한도를 1,500만원으로 설정하고 서비스 정착 후 한도를 최대 3,000만원까지 확대
- **(금융위·금감원에 대한 보고)** 평균 거래금액, 최고 거래금액, 월 이용 횟수 및 금액, 복합할부 등 연계서비스 이용 현황 등 서비스 이용 현황을 분기별로 금융위·금감원에 보고하고, 서비스 운영 중 이상거래 등 특이사항 발생시 즉시 보고
- **(제휴사업 범위)** 사업 초기 위험관리를 위하여 신청인이 사업 제휴를 통해 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온라인 중고차 거래 플랫폼은 3개로 제한하되 일정기간 사업 진행 후 금융위·금감원과 협의를 통해 조정 (제휴 외 개인간 거래 이용 제한은 없음)
- **(소비자 보호방안 마련)** 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한 이상차량 여부 등 차량 확인 절차와 판매자의 일회성 가맹점 자격 심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구매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일부에 대한 신청인의 책임범위를 설정하는 등 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

7. 지정일 : 2020. 2. 19.

8.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2년

관 계 법 규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4조(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① 금융위원회는 제13조에 따른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제5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과 관련 있는 행정 권한을 가지는 기관(이하 "관련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동의를 거쳐 2년의 범위 내에서 혁신금융 서비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당 혁신금융서비스의 종류, 내용 등 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
2. 해당 혁신금융서비스 이용자의 범위 등 업무 대상에 관한 사항
3. 해당 혁신금융서비스의 업무방법에 관한 사항
4. 자료제출, 검사 등 감독에 관한 사항
5. 금융관련법령 중 적용이 배제되는 규정 등 규제 적용의 특례에 관한 사항
6.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의 효력기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 등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지정을 하는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자는 대상 서비스의 변경, 서비스의 추가, 사정의 변경,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금융위원회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항의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변경 또는 취소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혁신금융사업자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5조(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① 제4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기 위한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등
2. 국내에 영업소를 둔 「상법」상의 회사

②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기간을 금융 서비스별 또는 신청 회차별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으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공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신청서 검토 결과 미비사항이 발견되거나 소명이 부족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포함한다)는 관련 행정기관이 있는 경우, 그 신청 내용을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련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취소)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련 행정기관의 동의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3조제4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혁신금융사업자가 제18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한 경우
 4. 혁신금융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혁신금융사업자가 이 법에 따른 규제 적용의 특례를 인정받지 않은 규정을 위반한 경우
 6. 혁신금융서비스가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 또는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7. 혁신금융서비스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 ②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 취소한 경우에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13조(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혁신 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③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대학교 부교수 이상으로 또는 기술·금융 관련 연구소에서 7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3. 기술·금융 관련 업계에서 임직원으로서 7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4. 법률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7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5. 소비자보호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7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④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심사한다.

1. 해당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가 국내 금융시장에서 주된 활동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여부
2. 해당 금융서비스가 기존의 금융서비스와 비교할 때 충분히 혁신적인지 여부

3. 해당 금융서비스의 제공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되는지 여부
 4. 이 법에 따른 규제 적용의 특례 없이도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특례를 적용할 경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규제를 회피하거나 우회하는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부
 5. 신청자가 해당 금융서비스를 적절히 영위할 자격과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6. 영위하고자 하는 금융서비스의 범위 및 업무방법이 구체적이며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한지 여부
 7. 다음 각 목의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방안 등이 충분한지 여부
 - 가. 이용자의 범위 또는 이용자 수, 건별 거래 금액의 한도, 고객별 거래 횟수 등에 대한 제한 방안
 - 나.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험 고지 및 동의 수령 방안
 - 다. 제28조에 따른 분쟁 처리 및 조정 방안
 - 라. 지정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피해 및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
 - 마. 책임보험 가입 등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
 - 바. 지정기간 종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피해 및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
 - 사.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 등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8. 해당 금융서비스로 인하여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이 현저히 저해될 우려 등이 있는지 여부
 9. 해당 금융서비스가 금융관련법령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 등이 있는지 여부
- ⑤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 이후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위원회 및 관련 행정기관에 법령의 제·개정을 권고할 수 있다.
- ⑥ 그 밖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규제 적용의 특례) ① 혁신금융사업자가 지정기간 내에 영위하는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업 또는 사업자의 인허가·등록·신고, 사업자의 지배구조·업무범위·건전성·영업행위 및 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와 관련이 있는 금융관련법령의 규정 중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특례가 인정되는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특례를 인정할 경우 금융소비자의 재산, 개인정보 등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되거나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이 현저히 저해될 우려 등이 있는 금융관련법령상 규정에 대하여 특례를 인정할 수 없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5. "신용카드가맹점"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소지자(이하 "신용카드회원등"이라 한다)에게 신용카드·직불(直拂)카드 또는 선불(先拂)카드(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

제18조의3(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

②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가 제1항에 따른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 신용카드가맹점(이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개정 2010.3.12] [[시행일 2010.6.13]]

②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를 할 때마다 그 신용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이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시행일 2015.7.21]]

④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0] [[시행일 2015.7.21.]]

⑤~ ⑦ (생략)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중소금융과	여신금융감독국
연 락 처	02-2100-2990	02-3145-7550